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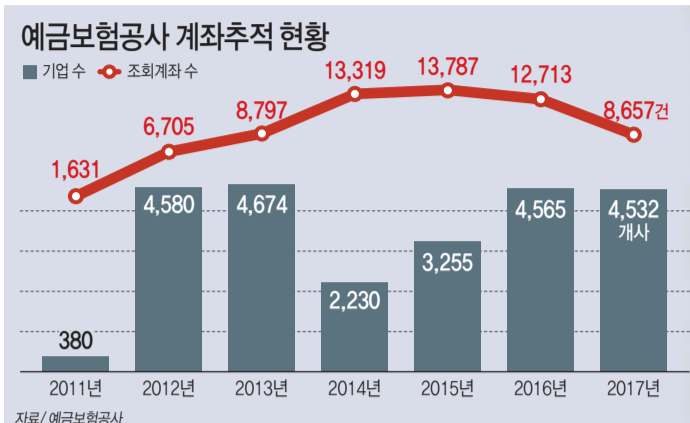
계좌추적권 상시화 추진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예보법 개정안 들여다보기

③ 일몰된 계좌추적권

재산은너 적발 위한 필수 권한
‘3년마다 기한 연장’ 불편 지적

6년동안 6.5만 계좌 추적했지만
수사 의뢰건수 18건·35명 불과
오용된 과도한 사법권한 의견도



자료/예금보험공사

#. 2011년, 200억원이 넘는 토지를 담보로 한국저축은행에서 7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한 김 대표(A 개발)는 저축은행 부도로 사업이 좌초되며 1년 만에 대출연체자가 됐다. 이후 예보는 약 4년간 채무자 A 개발과 금융 거래가 있던 사람과 거래가 없던 사람 167명의 계좌 503건을 조회해 김 대표를 배임 횡령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 대표에 대한 은닉재산이나 불법행위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 기한연장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로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14년 3월까지 유효했던 예보의 계좌추적권은 은닉

필요하지만 계좌추적권이 무분별하게 남용돼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계좌추적권’으로 불리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한마디로 제한 없이 금융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 계좌에 얼마가 언제, 어느 계좌에서 들어오고 나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금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불법재산을 추적하는데 사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공적자금에 대거 투입된 후 부실저축은행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14년 3월까지 유효했던 예보의 계좌추적권은 은닉

재산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2019년 3월까지 재연장된 후 현재 권한이 사라진 상태다.

◆“계좌추적권 공적자금 회수 위해 필요”
예보와 금융당국은 계좌추적권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관련자의 재산조사와 부실채권을 추궁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차 교묘해지는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필수 권한이라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한 두 해가 걸릴 일도 아니고 시한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만큼 계좌추

적권도 유효기간을 정해놓기보다는 상시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 자금은 총 31조7000억원이다. 특별계정에서 27조2000억원, 저축은행 계정에서 4조5000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13조8500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부실저축은행 자금회수 기한을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상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계좌추적권 권한 오·남용 될 수 있어”
반면 계좌추적권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

에 계좌추적권은 예보에 부여된 과도한 사법적 권한이라는 것.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좌추적을 한 기업은 총 2만4216곳으로 총 6만5000여 계좌에 달한다. 하지만 계좌추적을 토대로 예보가 부실책임 기업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18건, 35명에 불과하다.

계좌추적권 정보에는 계좌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개설일,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다. 거래정보를 통해 개인의 소비성향 사회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 또 계좌조회사실을 계좌주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자료내역을 관리할 필요도 없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안현수 법학박사는 “계좌추적권에 대한 운영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만큼 기본권보호와 공익추구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계좌추적권으로 확인된 정보 파기 등 관리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의 오용·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모리 이어 시스템반도체까지 위상 굳건한 ‘반도체 코리아’

삼성, 2·4분기 반도체 매출 회복
인텔은 매출 줄면서 격차 대폭 ↓
시스템반도체 육성 효과 ‘톡톡’
SK하이닉스, 생산라인 확장세

반도체 왕국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으려는 모양새다. 어려움 속에서도 초격차를 지속하는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면서 내실도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13일 IHS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129억 7200만달러 매출을 올렸다.

인텔이 154억 4900만달러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격차가 30억달러대에서 20억달러대로 대폭 감소했다.

인텔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영향이다. 인텔은 올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조금씩 줄었다. 1분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2분기에는 8%나 후퇴했다.

주력 시장인 CPU 부문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생산난에 빠진 상태에서, 경쟁사인 AMD가 3세대 라이젠을 출시하면서 경쟁력을 다소 뺏겼다는 것. 그나마 사물인터넷(IoT) 부문에서만 선전했을 뿐, 데이터센터 등에서는 부진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다시 매출액을 회복할 조짐이다. 지난 1분기 121억 7100만달러로 최저점을 찍고 2분기 다시 상승 전환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성장 전환하는 분위기인데다가,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이 비로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EUV 7나노미터 파운드리 가동을 시작하고 AMD



삼성전자 반도체 클린룸.

/삼성전자

와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에 수주를 받는 데도 성공했다. 조만간 5나노미터 공정도 양산을 시작하고 대만 TSMC와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이미지센서 시장에서도 업계 판도를 뒤바꿀 전망이다. 최근 업계 최초로 1억 6000만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개발에 성공하면서다. 일본 소니를 기술력으로 따라잡은 셈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위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부문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모습이다.

최근 SK하이닉스는 128단 1Tb TLC 4D 낸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했고, HBM2E D램 개발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개 모두 메모리반도체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10% 이상 생산량을 줄이긴 했지만, 생산 능력을 축소하지는 않았다. 이천과 충주, 중국 우시와 충칭 등에 생산공장을 꾸준히 확장하는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역량도 조금씩 키우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일부 구형 D램 생산 라인을 CIS 라인으로 전환하기

로 결정했고, 매그나칩 인수 작전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은 글로벌 시장 정세에도 적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IC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33개 반도체 품목 대부분이 역성장 늪에 빠졌지만, 시스템반도체 8개는 큰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산업과 기타 반도체 매출이 38%에 달했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반도체(DDI)가 19%, 프로그래머블 반도체(PLD)가 10% 등 성장폭도 크게 접혀졌다.

변수는 일본 수출규제다. 일단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는 모습이지만, 추가 규제 위기감은 여전하다.

미중 무역분쟁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가운데, 중국은 다시 반도체 굴기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인텔이 중국 바이두와 레노버 등 업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경제계를 중심으로 갈등을 완화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김재용 기자 juk@

내년 기약하는 ‘5G 아이폰’… 경쟁서 뒤쳐지나

▶▶ 1면 ‘막으려 5G 스마트폰’서 계속

듀얼스크린 후속작도 함께 공개한다. LG전자에 따르면 새로운 듀얼스크린에는 화면을 덮은 상태에서 완전히 펼친 상태까지 어느 각도에서도 고정해 사용할 수 있는 ‘프리 스태프 힌지’ 기술을 적용했다. 닫힌 상태에서도 전면 알림창을 탑재해 날짜와 시간을 볼 수 있다.

애플도 다음 달 신제품 ‘아이폰 11’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10일 신제품을 발표한 후 20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4G 모델로 출시된다. 5G가 적용된 애플의 아이폰은 올해에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애플이 퀄컴과 특허 분쟁을 벌이다가 올해 4월

화해하면서 5G 모뎀 확보가 늦어진 탓이다.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애플이 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애플의 5G 스마트폰은 2020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화웨이는 ‘메이트30 프로’를 9월에 출시한다. 메이트30에는 화웨이가 독자 개발한 운영체제(OS ‘鸿蒙’)가 탑재된다. 화웨이의 폴더블폰 ‘메이트 X’도 출시가 임박했다. 갤럭시 폴드와 메이트 X가 나오면 제대로 된 폴더블폰이 시장에 처음 등장하는 만큼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AI, 법률자문사 노무사 등 자격사 타격”

▶▶ 1면 ‘로봇변호사 이어’서 계속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대법원산하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리걸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회 법률인공지능 콘퍼런스를 연다. 콘퍼런스 부대행사로 는 변호사들(2인1조)로만 이뤄진 팀과 변호사와 AI가 함께하는 리걸 AI팀이 계약서 검토자문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심사위원단이 사전에 준비한 근로계약과 비밀유지계약 내용을 분석해 자문과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회다.

사무국은 변호사팀(8개)과 리걸 AI팀(2개) 등 모두 10개팀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행사를 준비 중이다. 리걸 AI팀은 법률정보시스템 개발기업인 인텔리 콘 메타연구소가 개발한 AI 프로그램

를 사용한다. 인텔리 콘 메타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스스로를 “2015년 지능법률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16년과 2017년에 세계법률AI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노무사와 법무사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AI가 자문한 계약서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면 부동산중개 영역은 물론 공중 분야까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한편, 이 때문에 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자격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전문가자격이 없는 AI가 특정 자격이 필요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손현경 기자 son89@